

경기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고심

고양·김포·파주 일대 'DMZ·한강 하구'에 지정 추진
주민들 지금까지 군사·문화재 보호 중첩규제 시달려
지자체들, 공감하지만 반대 여론 때문에 동참 어려워
연천군 인식 개선 교육으로 공감 이끌어...해법 모색

경기도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 지정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도는 고양·파주·김포시 일대 비무장지대(DMZ)와 한강 하구를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정해 생태 환경을 지키고, 지역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했지만 지역 주민들은 지금까지 군사보호시설·문화재 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에 시달려 이를 또다른 규제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고양·파주·김포시는 도의 지정 계획엔 공감하면서도 반대 여론을 의식해 선뜻 동참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5일 도에 따르면 DMZ와 한강 하구 일대를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정 계획 지역은 고양·파주·김포시다. 고양시의 경우엔 구산·법곶·대화·장항·신평 등이다. 파주시는 적성·진동·진서·군내·장단·파평·탄현면과 문산읍이다. 김포시 월곶·하성·양촌면도 계획 지역이다.

그러나 3개 자치단체 모두 지정 추진에 당장 동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도 취지엔 공감한다. 그런데 행주 어촌계 주민이나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생물권 보전 지역 지정 뒤 불이익이 생길 거라고 여긴다”며 “그런 만큼 이런 인식을 먼저 바꾼 뒤 추진하는 게 좋다고 본다”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고양시는 10년 동안 한강 하구 전체를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관련 지역인 파주·김포시민들의 반대가 심했다. 이러면서 현재 고양 장항 습지만 단독 등록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파주시도 고양시와 비슷한 이유로 생물권 보전 지역 지정 추진에 난색을 보인다.

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은 민통선이 많다. 이마저도 타 지역 시민의 토지 소유 비율이 50%가 넘는다”며 “대부분 투자 목적으로 땅을 산 사람들인데, 생물권 보전 지역을 지정하면 토지 가치가 떨어진다고 우려한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을 지정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다. 이 부분을 앞으로 해당 지역 시민들께 널리 알리겠다”면서 “현재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중이다. 조만간 민관 협의체를 꾸려 추진 방향을 논의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연천군의 사례가 해법으로 꼽힌다. 군은 지난해 6월 국내에선 7번째로 유네스코 임진강 생물권 보전 지역 지정에 성공했다.

추진 당시 중첩 규제를 우려한 주민 반대가 많았다. 하지만 군은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끝내 주민 공감대를 끌어냈다.

군 관계자는 “생물권 보전 지역이 생기면 지역 가치가 그만큼 상승한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계속 알렸다”라며 “지금은 오히려 주민들이 이를 계기로 지역이 더 발전하리라고 기대한다”고 설명했다.